

강원도

▶ 강원품관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1월 20일까지 '2011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강원품관원과 도내 각 시·군 출장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후 선정된 축산농가는 축종별(한우·젓소·돼지·닭·오리·오리알)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출하 실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을 3년 동안 매년 최대 2,4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 중 축산업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HACCP 지정,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은 농가다.

충청북도

▶ 한파 속에 병아리 부화시킨 토종닭 화제



일반적으로 봄·가을에 포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종닭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병아리 열한 마리를 자연 부

화시켜 화제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중매사찰 태고종 대성사(주지 혜철스님)는 6년 전부터 경내(境內)에 풀어 놓고 키우던 토종 암탉 2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지난해 12월 10일 병아리 열한마리를 부화시킨 뒤 정성스레 키우고 있다.

어미 토종닭이 알을 품은 곳은 비닐과 보온덮개 등으로 스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닭장으로 한 쪽 방향은 닭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터놓은 형태다.

이 암탉은 스님이 한편에 깔아 놓은 짚더미 위에 암탉들과 함께 낳은 12개 가량의 달걀을 품었으나 11개를 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토종닭은 봄과 가을에 15~17개의 달걀을 한 번에 품어 21일 만에 부화시킨다. 겨울철의 경우 달걀을 품는 암탉이 간혹 있긴 있으나 대부분 자연 부화에 실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상남도

▶ 축산업 경쟁력 강화 1,710억원 투입

경남도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71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축산 관련 사업비가 지난해 1,670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난 1,71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6일 한·EU 협상타결,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등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FTA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집중 반영키로 했다.

경남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5개 분야로 2011년 말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발효 시설, 양질의 풀사료 생산지원 등 14개 사업에 608억원을 투입한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질병 청정화를 위한 소독약품 지원, 가축질병 컨설팅사업 등 11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양봉산업 구조개선 등 9개 사업에 292억원을, 축산능가 경영안정을 위해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등 13개 사업에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학교우유 무상급식, 농장과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컨설팅 지원, 브랜드육 타운조성 등 7개 사업에 94억원을 투입할 방안이다.

도록 해당 농장과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질병검사와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안전한 물과 사료를 공급,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2010년 친환경농업대상에 '담양군' 선정

전라남도는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창의성을 발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재배생산, 가공·유통, 친환경축산분야 등으로 나눠 '전남도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를 확정,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했다.

자치단체 분야에서 2010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67% 이상 늘어난 담양군이 대상과 상 사업비 3억원을 받았다.

이어 장흥군이 최우수상과 2억원, 함평군과 보성군이 우수상과 각각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올해 첫 시행한 친환경축산분야에는 돼지 3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장성 오재곰씨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5만1천여마리의 닭을 사육,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나주 봉필신씨와 한우 품질 고급화에 기여한 함평 이재영씨가 받게 됐다.

전라남도

▶ '축산물HACCP' 사업량 63곳 확보

전라남도는 올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도지원사업 중 63곳의 사업물량을 확보했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 55, 경북 46, 전북 34, 경남 28, 충북 20, 강원 14, 제주 6곳 등으로 전남이 전국 최다 사업량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되

▶ 비자 나뭇잎 활용 고향균력 사료 기술 개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침엽수인 비자 나뭇잎을 첨가한 사료가 닭의 항균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축산시험장은 최근 완도수목원에서 채취한 은행, 뽕가시, 동백, 비자 나뭇잎 등 추출물의 항균력을 시험한 결과 비자 나뭇잎 추출물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시험장은 사육하는 닭 360마리를 대상으로 일반 배합사료에 비자 나뭇잎을 0.2, 0.4, 0.8, 1.6%씩 각각 첨가하고 닭에 병원성 세균을 감염 시키고서 항병력 비교시험을 했다.

그 결과 비자 나뭇잎을 말려 분말화해 일반배합 사료에 0.2% 첨가했을 때 닭이 배합사료만 먹일 때보다 체중이 많이 늘고, 항병력은 0.4% 첨가한 사료를 먹었을 때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시험장은 이 연구결과를 활용해 닭을 키우면 폐사율이 5% 줄어 연간 9억4천600만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키우는 닭은 1천108만1천여마리에 달한다.

축산시험장 관계자는 “2012년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천연자원인 비자 나뭇잎을 활용한 이번 연구가 효용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칩닝쿨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대체 항생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자나무는 자생 북쪽 한계선이 장성 백양산으로 열매는 구충제, 종자는 식용유로 쓰이며 식욕 증진, 소화 촉진, 변비 및 치질치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 익산 한센인 정착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정착농원이 5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전북도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으로 새만금 수질 오염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폐수 등에 따른 수질오염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은 2011~2015년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이 지역 익산, 금오, 신촌 등 3개 집단 농장은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700여 마리를 키우며 생계를 잇고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할 수 있다.

도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와 축사시설 소유자에게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전주동물원 무기한 휴장

전북 전주시는 1월 3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5일부터 전주동물원을 무기한 휴장한다”고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가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고병원성 시가 전북 익산에서 발병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동물원 입·출입은 물론 동물원 내의 행사나 공사도 모두 금지된다. 전주동물원에는 코끼리, 하마, 기린 등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무제류 동물 14종 69마리, 닭과 오리 등 AI에 취약한 조류 동물도 48종 257마리가 있다.

전주동물원은 현재 심각 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 타시도 가금육 1월 1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와 가금육, 알 등을 1월 1일 새벽 0시를 기해 전면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신고된 병원균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형질형 H5N1)로 판명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AI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AI 방역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특별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24시간 비상신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제주산 닭고기의 수출도 중단돼 향후 수출재가가 지연되고, 도내 닭·오리고기 소비위축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 악취 공해 사라지나

제주도가 가축분뇨로 만드는 액비의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늘려 가축분뇨 때문에 생기는 악취 공해와 지하수 오염 제로화에 도전한다.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도가 마련한 가축분뇨 처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축산농가별로 기초 자료를 수집, 전산화해 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수거, 처리하기까지 모든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를 올해 전국에서 처

음으로 도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시하고, 맞춤형 처리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과 함께 도내 가축분뇨 운송차량 118대를 대상으로 상시 감독시스템을 운영한다.

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920억원(국비 500, 지방비 250, 자담 170억원)을 들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일 처리능력 300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4개소(일 처리능력 각 100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2개소(일 처리능력 각 100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공동자원화·에너지화 처리비율이 현재 45%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도는 낡은 개방형 돈사를 창이 없는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돼지와 소, 닭을 기르는 축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발효하지 않은 액비 등을 농사용으로 뿌리지 않도록 지도해 가축분뇨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현재 돼지 55만마리, 닭 140만마리, 소 3만2천마리 등이며,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131만4천여톤이다.

도는 지난해는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가운데 79.5%는 퇴비나 액비로, 14.4%는 축사 세척용으로, 5.9%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제대로 발효하지 않은 액비나 퇴비 등을 살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을 시왔다. 